

보도자료		 The Media Network for Justice	
보도요청: 2019.09.10.(화) 배포 즉시			
담당	유 은 실, 이 석 우		
연락처	(02) 741-7662 010-3939-0082		FAX (02) 741-7663
E-mail	mirifica@naver.com		

[미디어연대 성명 -2019.09.10.]

“문재인 정권과 공영언론은 대국민 사죄 · 진실 회귀하라”

“위선·불법·이념 의혹 조국 임명 강행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전”

“조 장관 수사 저지 선동하는 KBS등 공영언론은 정권 보위 중단하라”

문재인 대통령의 9월 9일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은 대한민국과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위선으로 점철된 도덕성과 명백한 불법 혐의 및 이념 불투명성을 무시한 국정운영이다.

강행의 이유로 검찰개혁을 내세웠지만 국가적 정의와 공정 확립의 우선적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조 장관은 개혁 추진 자격도 이미 상실한 인물이다.

그럼에도 이날 KBS 등 공영 방송·언론들은 국민 오도에 앞장섰다.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언론은 국민의 언론이지 특정 정권의 언론이 아니다.

KBS와 MBC는 이미 지난 2일 전대미문의 장관후보자(조국) 청문회 대용 국회 기자간담회라는 여권의 일방적·위법적 행위를 여과없이 장시간 생방송으로 내보낸 데 이어, 이날 저녁 메인 뉴스 시간에서는 조 장관 임명강행 소식을 첫 머리에 각각 6건씩 다루면서 그중 3건은 ‘검찰개혁 정면돌파’ ‘원칙, 일관성 지켜’라며 임명의 당위성을 부각하는 시각으로 다시 일제히 앞부분에 보도했다.

나머지 3건은 여야와 검찰의 반응을 다뤘지만 정쟁적 시각 중심이었다.

특히 KBS는 앵커와 취재기자의 대담 분석 코너에서 “조 장관의 불법 개입 정황이 나온 게 없다” “조 장관의 특수통 검사들(조 장관 의혹 수사담당)에 대한 인사권(행사)에는 시간이 걸리겠군요”등 명백히 사실을 왜곡하고 검찰수사 저지를 선동하는 듯한 멘트를 내보냈다.

KBS가 이전 정권 문창극 총리 지명자 청문회 때는 문 지명자의 교회 간증을 톱뉴스로 왜곡보도하면서까지 비판했던 것을 상기하면 결국 특정 진영 보도기관화돼 있음을 분명히 재확인시켜 주고 있다.

연간 수백억원의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 공영언론 연합뉴스도 이날 저녁 홈페이지 첫면 뉴스 편집에서 11건의 관련뉴스중 8건을 ‘개혁 완수, 정면돌파’라는 기조로 앞세워 올렸다.

야당과 대학가의 반대 보도는 단 2건이었고, 조 장관에 대한 수사 적절 여론이 높다는 여론조사 내용은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끼워 넣었다.

모든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나듯 명백히 국민 다수의 반대 여론에 반하는 보도들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명 관련 대국민 메시지에서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 “검찰과 장관이 각자 해야할 일을 해 나가면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했다.

조 장관의 의혹은 의혹 차원을 넘어서 있다.

딸의 논문 제1저자 기재가 그의 서울대 PC에서 작성 저장됐고, 부인 재직 대학 총장에게 은폐 조작을 종용한 증거가 거의 명확하며, 조국 펀드와 직결된 곳에서 부인의 불법의혹성 자문비 수령 사실이 밝혀졌을 뿐 아니라 검찰 내부 수사문건에 조 장관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까지 확인됐다.

강한 불법 의혹들이 하나둘이 아니다.

이전 정권들에서는 그런 의혹들중 하나만으로도 지명이 취소됐다.

불법 의혹 장관과 그 휘하 검찰이 각자 일하면 된다는 얘기는 더더욱 귀를 의심케 한다.

정의와 상식이 자의적으로 요리된 말이다.

국가 운영의 절대적 기본인 법이 사라졌다.

도저히 한 국가의 원수가 가질 수 있는 인식이 아니다.

‘미국의 월남전 패배에서 희열을 느꼈다’는 문 대통령의 체제관련 발언과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활동 경력과 관련해 전향했냐는 청문회 질문을 끝끝내 비켜간 조 장관의 인식까지도 다시 우려스럽게 떠오른다.

지도자로서 국민에게 공념과 거짓의 의혹을 떨쳐 주지 못하면 큰 국가적 불안이다.

진실과 상식, 정의와 공정이 과거회귀적이거나 자의적·선택적으로 전도·왜곡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 언론이 이를 사실상 동조까지 하기에 이르면 더 이상 온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국가일 수 없다.

문재인 정권과 공영 언론들에게 국가와 국민의 이름으로 통절히 요구한다.

대국민 사죄하고 진실과 법으로 회귀하라.

2019년 9월 10일

미디어연대(공동대표 이석우 조맹기 황우섭)